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9만5000명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9만5000명에 모바일 등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및 우편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포함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이며,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신고·납부 해야 한다.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을 경우 신고서에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용한다.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확정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진, 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 총급여 8000만원까지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를 총급여 8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복지정책이다.

대상과 혜택은 무주택 월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7000

만원인 경우 월세의 15%,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까지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기간 물가 상승분 등을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고용진 의원은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월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필요한 주거안정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안구백, 임호선, 김민석, 강득구, 박상혁, 김수흥, 김민철, 인재근, 이인영, 조웅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산불피해 영주 납세자들도 종소세 납기 3개월 연장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경주지역 납세자들과 불과 며칠전인 4월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주 지역 납세자들은 5월말이 아닌 8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들 3 지역 납세자 중 종소세 신고 대상 6만5000여명은 신고는 반드시 5월31일까지 해야 하지만 납부는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신청 없이 8월31일까지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8일 "5월31일 마감인 2022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하며,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도 납부기한이 10월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포항·경주지역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직원들이 개별 전산처리 했던 반면 이번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소득세과에 일괄 연장을 건의, 납세자의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자동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세무서 직원의 업무부담도 크게 축소됐다"고 덧붙였다.